

북중러 협력과 러시아의 대외전략

계성훈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shjeh@hufs.ac.kr

I. 머리말

2025년 9월 3일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대회’ 열병식에서 시진핑 주석을 사이에 두고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나란히 서 있는 역사적 장면이 연출되었다. 당시 3자 정상회담은 없었지만, 하루 전날인 9월 2일 중러 정상회담, 9월 3일 북러 정상회담, 그리고 9월 4일 북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진행되면서 북중러 협력이 적어도 양자 관계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결정적 계기는 2024년 6월 19일, 24년 만에 이루어진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2월 서명된 ‘북러 친선·선린 및 협조 조약’과 같은 해 7월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이 소련 해체 후 한동안 소원했던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그쳤다면, 2024년 6월 서명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질서의 변화를 배경으로 양국 관계를 과거 냉전 시기 수준까지 강화했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북중러 협력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러시아의 세계정세 인식과 대외전략을 검토한 후, 이에 기초하여 먼저 북중러 협력의 한 축인 북러 관계 강화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의도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다른 한 축인 중러 관계의 변화 가능성과 북중러 3자 협력의 공식화 가능성을 점검하여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데 있다.

II. 러시아의 세계정세 인식과 대외전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인 2023년 3월 푸틴 대통령이 승인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Ф, 2023)에 나타난 러시아의 세계정세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질서의 다극화가 진전되고 있지만, 다극 세계의 현실을 인식하기를 거부하는 소수 국가의 그룹이 이에 저항하고 있다. 둘째, 세계질서의 변화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협력 체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동시에, 포괄적 안보 위협과 강대국 간 충돌 위험도 나타나고 있다. 셋째, 세계질서의 위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외부 압력을 받는 국가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미국과 그 ‘위성국들’은 세계질서의 중심 중 하나로서 러시아의 강화와 독립적인 대외정책을 서방 패권의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러시아의 전면적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 인식에 기초하여, 러시아는 대외전략의 중심을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주권 확보를 추구하는 비서방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에 두고자 한다.

러시아는 대외전략 파트너를 서방 또는 유럽·대서양 지역에서 비서방 또는 러시아가 사용하는 용어로는 ‘세계 다수(World Majority)’로 전환하고 있다. 러시아 학계의 주요 인사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대외전략 공간이 ‘집단적 서방’과 ‘세계 다수’로 분리되었다고 지적한다(Караганов, Крамаренко, Тренин, 2023, pp.9~10). 여기서 ‘세계 다수’는 단일체나 블록이 아니라, 독특한 문화, 고유한 정치적 전통, 다양한 발전 수준을 가진 수십, 수백 개의 다양한 공동체이고, 구조적으로는 중국, 인도와 같은 ‘국가-문명’과 여러 문명 공동체로 구성된다. 러시아는 다극 세계질서 건설에서 ‘세계 다수’가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고, 러시아는 그들의 우호적 파트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세계 다수’가 반서방은 아니지만, 명백히 그들의 요구가 서방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세계질서를 민주화하고, 신식민주의적 관행을 근절하며, 세계 정치·통화·금융 체제에서 압력 및 협박을 위한 도구를 금지하는 데 있어 러시아의 자연스러운 협력자가 된다고 강조한다(Караганов, Крамаренко, Тренин, 2023, p.5). 따라서 러시아가 자신의 전통적 세력권에 있다고 인식하는 탈소비에트 국가들을 제외하면, 러시아의 대외전략에서 아태지역, 중동·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핵심적 또는 잠재적 동맹국 및 파트너들로 부상하고 있다.

새로운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Ф, 2023)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대외전략의 목표는 세계질서의 다극화 촉진, 국제 안보의 유지·강화, 경제 안보를 위한 경제협력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질서의 다극화 촉진을 위한 과제는 ① 서방의 패권 기반 청산과 러시아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방해하려는 서방의 시도 억제, ② BRICS, SCO, CIS, EAEU, CSTO, RIC 등의 잠재력 강화와 국제적 역할 제고, ③ 아태지역,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에서 지역 및 소지역 통합 지원, ④ 사이버 인본주의 및 기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원칙을 강요하려는 시도의 무력화와 다양한 문화·종교·문명 간의 건설적 대화 및 동반자 관계 형성 등이다. 둘째, 국제 안보의 유지·강화를 위한 과제는 ① 군사 분야에서 서방의 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상호 협력 구축, ② UN 헌장을 위반하는 군사력 사용 방지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 증대와 주권 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조치 시행, ③ 러시아와 그 동맹국들에 대한 무력 공격의 격퇴 및 예방, 위기 해결, 평화 유지·회복에 군사력 사용, ④ 동맹국 및 파트너들의 국방 및 안전 보장과 외부의 내정 간섭 시도 무력화 지원, ⑤ 러시아의 중요 이익 지역에서 지역 안보 및 위기 해결 메커니즘의 창설·개선 촉진 등이다. 셋째, 경제 안보를 위한 경제협력 확대의 과제는 ① 세계 경제 거버넌스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세계 무역 및 통화·금융 체계 개편, ② 서방으로부터 독립적인 국제 결제 인프라 발전과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결제 시 자국 통화 사용 확대를 통한 러시아 경제의 서방에 대한 의존도 감소, ③ 세계 시장에서 러시아의 입지 강화 및 비원료·에너지 수출 증대와 러시아에 대해 건설적이고 중립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로의 방향 전환을 통한 경제 관계의 지리적 다각화, ④ 러시아·벨라루스 국가연합, EAEU, CIS, SCO, BRICS 차원에서 ‘대유라시아 파트너십’ 형성을 목적으로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하는 지역 및 지역 간 경제 통합 과정 고무, ⑤ 국가 경제 발전과 유라시아 운송 및 인프라 상호 연계성 강화를 위한 러시아의 지리적 위치와 운송 잠재력 활용, ⑥ 탈소비에트 국가들과 러시아에 우호적인 국가들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개발 촉진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러시아의 대외전략이 트럼프 2기 정부의 ‘유화적인’ 대러 정책에 따라 다시 전환될 가능성은 없을까?(제성훈, 2025, pp.1~25)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바이든 정부와 달리,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정부는 러시아의 요구조건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평화적으로 종식하고, 이에 기초하여 러시아와 ‘관계 재설정(reset of relations)’을 추진하고자 한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무역 관계의 급격한 조정을 통한 ‘전략적 견제(strategic containment)’를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안정 보장과 경제적 이익 확보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균열을 일으켜 중국을 견제하려는 ‘역 키신저 전략(Reverse Kissinger)’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중러 관계가 미국 주도의 기존 세계질서에 대한 불만과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열망에 기반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경제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좁고,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정치적·경제적·군사적 협력의 이점을 대체할 만큼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러 관계의 개선은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트럼프 2기 정부의 ‘유화적인’ 대러 정책은 서방 주류 엘리트의 반대와 러시아 주류 엘리트의 불신으로 인해 지속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설사 미러 관계가 일시적으로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집단적 서방’과 ‘세계 다수’라는 두 개의 분리된 대상을 상정하고 시행되는 러시아의 대외전략이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III. 북러 관계 강화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의도

현재 북러 관계 강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북러 관계 강화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러시아와 북한 간 임시방편적 협력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은 북러 관계 강화를 포탄·무기 및 병력이 필요한 러시아와 식량 및 에너지, 더 나아가 군사기술이 필요한 북한의 일시적 거래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면 현재와 같은 협력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북러 관계 강화를 러시아의 새로운 대외전략과 북한의 대외전략 간 결합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은 북러 관계 강화를 유라시아 동부에서 안보 파트너를 확보하면서 한반도에서 ‘전략적 재균형’을 시도하려는 러시아의 대외전략과 대외협력 파트너를 다변화하여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체제의 안전을 확보하며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북한의 대외전략이 결합한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미러 관계 또는 북미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북러 협력이 장기간 지속·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후자의 시각에 기초하면, 북러 관계 강화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의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제성훈, 2024, pp.42~43). 첫째, 러시아는 유라시아 동부에서 안보 파트너를 확보하고자 한다. 러시아의 관점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라시아 서부의 안보 위기는 유라시아 동부의 정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유라시아 서부의 안보 위기는 본질적으

로 세계질서 변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미국의 통제 밖에 있는 국가들의 자율적 행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유라시아 동부의 정세에 대해서도 세계질서의 변화에 부합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러시아는 중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전례 없이 강화하고 있는데, 실제로 유라시아 동부에서 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계가 없는 우호, 금지된 영역이 없는 협력’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병력과 무기·장비 동원은 물론, 서방의 경제제재 하에서 장기전 수행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중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만으로 유라시아 동부에서 미국의 유럽·대서양 동맹과 인도·태평양 동맹 연계 전략에 대응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6월 18일 푸틴 대통령은 『로동신문』에 게재한 “로씨야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북한과 함께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 분리적인 안전 구조를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뿌썬, 2024). 러시아는 새로운 세계질서 건설에 소극적인 중국과의 협력만으로 유라시아 동부에서 나타나는 안보 위협에 맞서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또 다른 안보 파트너로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군과 북한군은 그동안 군사훈련은 물론, 제대로 된 군사협력을 한 경험이 전혀 없어 상호 운용성이 부재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은 군사동맹에 필수적 기반인 상호 운용성 제고의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전략적 재균형’을 실현하고자 한다. 러시아는 군사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를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먼저, 군사적 측면에서는 핵무기 외에 북한이 보유한 재래식 전력(戰力)이 전반적으로 낙후된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측면의 ‘전략적 재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력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북러 조약에 따른 북러 군사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역시 현대전에 대한 북한군의 이해를 제고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최신 군사기술 및 경험을 전수하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장도 사실상 묵인하면서, 향후 남북 관계에서도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대북 경제제재 장기화로 인해 북한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남북 간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경제적 측면의 ‘전략적 재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 발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러 경제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최근 북한 노동자 파견 확대와 무역 활성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정비는 러시아의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부합한 결과이다. 러시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을 북한 노동자 파견 확대로 해결하고,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노출된 극동·시베리아 주민의 소비재 수요를 저렴한 가격에 충족시키고자 한다. 여기서 핵심은 러시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까지는 북한의 핵무장을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간주했는데, 이제는 한미일 군사협력과 대북 경제제재 장기화를 위협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는 데 있다.

IV. 중러 관계의 변화 가능성과 북중러 3자 협력의 공식화 가능성

북중러 협력의 또 다른 축인 러중 관계의 변화 가능성, 다시 말해 양국 관계의 균열 가능성은 있을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인 2022년 2월 4일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신시대 국제 관계와 지구적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중·러 공동성명’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 우호는 경계가 없고, 협력에는 금지된 영역이 없다.”라고 단언한 바 있다(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РФ, 2022). 또한, 2024년 7월 3일 아스타나에서 진행된 중·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상호협력의 러중 관계가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 그것은 평등, 상호 이익, 상호 주권 존중이라는 원칙 위에 세워졌다.”라고 강조했다(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РФ, 2024). 시진핑 주석 역시 양국은 “매우 불안정하고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직면하여, 양국은 장기적인 우호라는 애초의 지향과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결심을 더 확고히 견지하고, 중러 관계의 독특한 가치를 부단히 지키며, 양자 협력의 내적 동력을 발휘하고, 각자의 합법적 권리 수호와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 옹호를 위한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언급했다(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Р, 2024). 하지만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지 약 한 달 만인 2025년 2월 25일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은 한 인터뷰(Boyle, 2025)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2기 정부가 냉전 시기 닉슨 전 대통령이 중국을 소련에서 분리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러시아를 중국에서 분리하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서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중 관계가 21세기를 규정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인들과 미국인들 모두에 더 나은 결과는 러시아인들이 ‘하위 파트너’로서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중국 관계에 대한 트럼프 2기 정부의 접근 방식은 러시아가 점점 더 강해지는 중국에 대한 자신의 하위 파트너 지위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이 그러한 불만과 중국의 의도에 대한 러시아의 불신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Radchenko, 2021). 하지만 냉전기 미국과 중국에 의해 포위되었던 소련의 역사적 경험은 모스크바의 엘리트들에게는 트라우마로, 베이징의 엘리트들에게는 경계심으로 남아있다(제성훈, 2025, p.6).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마찰을 피하려고 애쓰는데, 이는 제3자가 이러한 마찰을 활용하는 것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웃이라는 운명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가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서로 싸우는 것보다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다(Radchenko, 2021). 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연루(entrainment)’ 못지않게 ‘방기(abandonment)’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 양국 관계의 변화는 상당 부분 미국의 대러 및 대중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제성훈, 2025, p.6).

한편, 새로운 북러 조약 체결 직후 한때 중러 관계 및 북중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주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되고 있다. 북러 관계 강화를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제성훈, 2024, pp.42~43). 첫째, 미국이 글로벌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는 한, 중국은 러시아가 필요하다. 미국이라는 글로벌 패권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대립과 분열이 자신들에게 파멸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기존 세계질서가 당분간 유지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러시아가 ‘공동전선’에서 이탈하는 것만은 두려워하고 있다. 더 나아가, 향후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로 인해 만일 현재 러시아가 직면한 정도의 경제적·군사적 압박을 받게 된다면, 러시아의 식량과 에너지, 무기와 탄약 지원 없이 결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중국은 잘 알고 있다. 둘째, 중국은 북러 관계 강화를 한미일 군사협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한미일 군사협력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비동맹 노선을 포기하고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러 관계 강화는 자신의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더 나아가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물론, 중국은 북한이 냉전 시기처럼 자신과 러시아의 경쟁을 부추기면서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를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속으로는 북러 관계 강화를 반기고 있지만, 겉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그렇다면 북중러 3자 협력의 공식화 가능성은 있을까? 주엔코(Ivan Zuenko) 모스크바국립

국제관계대(MGIMO) 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접근을 추구하지 않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오히려 러시아와 일정한 거리두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협력이 서로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내정 간섭과 자신의 가치 강요를 배제하는 상호 이익적이고 동등한 동반자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Зуенко, 2025). 또한, 루코닌(Sergei Lukonin) 프리마코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원(IMEMO) 중국경제·정치센터장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중국은 러시아의 동맹국이지만, 이 동맹의 유용성 정도는 그것이 미국과의 대결과 협력에서 중국이 얼마나 자기 주도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지에 달려있다고 지적한다(Lukonin, 2023, p.82). 한편, 로(Bobo Lo) 유럽정책분석센터(CEPA)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국제체제를 이용하려고 하고, 러시아는 그것을 파괴하려고 한다. ... 중국은 자신의 이익에 호의적이고 그에 따라 서방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질서에서 기정(既定)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 러시아의 이익은 글로벌 무질서에 놓여 있다.”라고 지적한다. 또한, 스텐트(Angela Stent) 조지타운대 유라시아·러시아·동유럽연구센터 선임고문 역시 러시아와 중국이 기존 질서의 전복과 그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하는 다극 체제 형성을 원하지만,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그들의 비전은 다르다고 강조한다(CEPA Editorial Board, 2023). 따라서 북한과 러시아는 세계질서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를 원하지만, 중국은 패러다임 내 변화, 다시 말해 여전히 기존 세계질서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북한 및 러시아와 3자 협력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다.

V. 정책 제언: 대러 정책을 중심으로

북중러 협력에 대한 러시아의 대외전략을 고려할 때, 대러 정책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러시아의 전략적 역할을 재설정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유라시아 동부의 안보를 강화하고 한반도에서 ‘전략적 재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대북 제재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과의 군사 및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바, 더 이상 북러 관계 이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전제로 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대안을 모색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번영 구상에 대한 러시아의 확고한 지지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장이 아니라, 유라시아 동부의 안보 강화이고, 북한의 경제 발전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략적 재균형’ 확보라는 점을

있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대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1990년대 북러 관계가 소원해지자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사라졌고, 2000년대 북러 관계가 개선되자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면서 러시아가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긴장 고조를 방지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이미 현실이 된 북러 관계 강화를 그저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러시아를 한반도의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안보 기여자’로 규정하면서,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 방지와 남북 관계 개선 촉진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전략적 역할을 재설정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회 간 대화 채널을 단계적으로 복원해야 한다. 2022년부터 중단된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와 산하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 한러 정책협의회, 한러 지방협력포럼 등을 유연하게 재개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경제제재에 따른 제한된 조건에서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서방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한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적절하고, 설사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회의 재개 자체가 의미 있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구성되지 않은 한러 의원친선협회를 신속하게 재구성하고, 러시아 상·하원의원들로 구성된 우호 그룹과의 합동회의 개최를 통해 정부의 제한된 활동을 보완하면서 한러 협력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도 할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 수백 년 동안 협력과 갈등, 동맹과 전쟁을 반복해 왔을 뿐 아니라, 정·관계, 재계, 문화계 등에 걸쳐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관계가 악화하더라도 충분한 ‘외교적 복원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그러한 경험과 능력이 없는바, 정부·의회 차원에서 대화 채널의 단계적 복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문헌

- 뿌진, 위. 『로동신문』, 「로씨야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 2024. 6. 18.
- 제성훈, 「새로운 북·러 조약의 내용과 의미」, 『월간 한국노총』, 604호, 2024.
- _____,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러시아-중국 관계」, 『통일정책연구』, 제34권 1호, 2025.
- Boyle, Matthew, “Exclusive — Rubio Details How Trump Going on Offense Against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Big Story of 21st Century U.S.-China Relations’,” Breitbart News, February 25, 2025(<https://www.breitbart.com/politics/2025/02/25/exclusive-rubio-details-trump-offense-china-belt-road-initiative/>, 접속일: 2025. 11. 25)
- CEPA Editorial Board, “Russia-China Relations: Partnership of Convenience?,” CEPA, January 19, 2023(<https://cepa.org/transcripts/russia-china-relations-partnership-of-convenience/>, 접속일: 2025. 11. 25)
- Lukonin, Sergei, “Russia-China Relations: An Asymmetrical Partnership?” MGIMO Review of International Relations, 16(2), 2023.
- Radchenko, Sergey, “Driving a Wedge Between China and Russia Won’t Work.” War on the Rocks, August 24, 2021(<https://warontherocks.com/2021/08/driving-a-wedge-between-china-and-russia-wont-work/>, 접속일: 2025. 11. 25)
-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РФ,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ях, вступающих в новую эпоху, и глобальном устойчивом развитии,” February 4, 2022(<http://www.kremlin.ru/supplement/5770>, 접속일: 2025. 11. 25)
- _____, “Встреча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НР Си Цзиньпином”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РФ, July 3, 2024(<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74461>, 접속일: 2025. 11. 25)
- Зуенко, Иван, “Наш ответ Рубио: нужна ли Россия Китаю как

《“младший партнёр»? Россия в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March 20, 2025(<https://globalaffairs.ru/articles/nash-otvet-ru-bio-zuenko/>, 접속일: 2025. 11. 25)

Караганов, С. А., А. М. Крамаренко, Д. В. Тренин,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в отношении Мирового большинства, Москва: НИУ ВШЭ, 2023.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Р, “Си Цзиньпин встретился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July 4, 2024. (https://www.mfa.gov.cn/rus/zxxx/202407/t20240705_11448681.html, 접속일: 2025. 11. 25)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Ф,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тверждена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В.Путиным 31 марта 2023г.),” March 31, 2023. (<https://www.mid.ru/ru/detail-material-page/1860586/>, 접속일: 2025. 11. 25)